

제358회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2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3월26일(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헌법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

상정된 안건

- 1. 헌법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 2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2차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 개헌 발의에 즈음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은 최상위의 국가 규범입니다. 개정 절차나 요건이 훨씬 엄격해서 웬만해서는 소수자들도 헌법 아래서 보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기도 합니다. 개헌안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민이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알려진 대통령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종식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습니다. 퇴임의 전후를 막론하고 불행한 대통령만을 보아 온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거나 줄이지 않고 포장만 4년 연임의 대통령제로 바꾸었습니다. 만약의 근원인 제왕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두고 임기만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면 이것은 헌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의장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악입니다.

○이인영 위원 어디까지 하시려고요.

○위원장 김재경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적절한 선에서 하세요.

○위원장 김재경 예.

국회는 2017년부터 개헌특위를 운영하면서 김원기·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마흔아홉 분의 자문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왔습니다.

11개월에 걸쳐 전체회의 8회 등 총 134회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형태에서 개헌특위 자문위의 다수 의견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와 분산해 가지는 분권형 정부제였습니다.

이런 노력과 결과가 대통령 헌법자문기구가 설치되고 불과 한 달 만에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이 결과가 달라져 대통령 발의 개헌안으로 국회에 넘어온다니 참담하고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나아가 발의 과정을 보면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너무나 가벼이 한다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 자문위는 활동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그 보고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개헌안은 확정되었습니다. 공론화의 과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해서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거친 의견은 거의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듯 보입니다.

또 당초 염두에 둔 오늘 자 발의를 맞추다 보니 국무회의 심의 과정도 통과의례식으로 지나갔

고, 가장 큰 국가 중대사임에도 국가원로자문회의 등 헌법상의 자문기구는 활용조차 하지 않은 일방통행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의 의장인 대통령 부재 속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외유 중인 대통령이……

○**윤관석 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김재경** 전자결재를 한 헌법개정안 발의……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예, 알았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윤관석 위원** 자, 짧게 몇 마디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길게 하시면 이건…… 특위 운영하는 책임자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조금만 들어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희 위원**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셔야 지금……

○**위원장 김재경** 다 됐습니다. 좀 더 들어 보세요.

(「말씀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대통령께서는 주어진 중대 권한을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이 아닌지요.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대한 예우를 너무 가벼이 하시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것이 국민과 한 약속 대선 공약을 지키는 길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더라도 6월 13일에 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국민 모두가 바라는 내용을 담은 헌법의 개정을 성사시키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대통령 발의 이 개헌안과는 다른 트랙에서 우리 특위의 개헌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헌법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

(14시13분)

○**위원장 김재경** 오늘 의사일정 제1항 헌법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상정합니다.

이인영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인영 위원** 우선 대통령 발의의 정당성, 하자성 이런 시비 이전에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으셨던 위원장께서 위원장으로서 사회자로서의 어떤 존엄과 권위를 스스로 상실하는, 의사

진행에 앞선 그런 모두발언 같은 것의 부적절성을 지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외부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어도 회의 진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객관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히 위원장께서 사회자로서 중립적인 진행 과정들을 보이셨는데 오늘 유독 그런 스스로의 존엄과 권위를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장께서 스스로가 적절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으면 사회자로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밝히실 수 있는 조건과 공간,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정특위의 전체회의 공식 석상에서 위원장으로서, 사회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의 존엄과 권위를 상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회의 석상에서 또 혹은 소위에서 서로가 토론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사회자로서의, 위원장으로서의 객관성·중립성·공정성 이런 것들을 상실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토론의 장 질서 체계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나 때로는 전체회의 석상에서 그와 같은 표현들은 자제하고 또 절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점을 결례가 아니라면 지적하고 싶고 또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 좀 받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나중에 의사진행발언을 다 듣고 난 뒤에 제가 덧붙일 말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진태 위원** 오늘 드디어 대통령 개헌안이 조금 전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헌안 자체가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위헌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현행 헌법 89조에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지하시피 이번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급조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제가 시간을 재보니깐 이 개헌안을 심의한 시간이 딱 40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헌안…… 수십 가지, 이 헌법의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것을 다 손보는 개헌안을 심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분이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그냥 국무회의는 형식적으로 들러리 세웠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헌법도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말입니다, 내 언젠가 이런 사고칠 줄 알았어요.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무슨 권력기관 개편안인가 혼자 들고 나와서 다 설명을 하고 하더니만 이제는 헌법개정안까지 국민을 상대로 사흘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민정수석이 됩니까? 비서입니다, 비서. 법무부장관이 해야 되고 국무회의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일개 비서가 이렇게 나서서 설쳐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 개헌안은 그 자체로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내용이 뭐냐 하나하나 들여다볼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절차를 위배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기 때문에 들여다봐서도 안 돼요. 바로 휴지통으로 직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불만도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통과시키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야당에서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논의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왔기 때문에 어차피 예상하고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행 헌법 말입니다, 현행 헌법.

(책을 들어 보이며)

이번에 다시 봐도 참 손색이 없는 헌법입니다. 이 소리 하면 또 반개헌 세력이다, 반개혁 세력이다 할지 모릅니다만 지금 저런 식으로 대통령 비서실 비서가 한 달 만에 얼키설키 엮어 가지고 온 헌법보다는 차라리 지금 있는 이 헌법이 훨씬 손색이 없다. 다만 정 손을 보려면 여기서 권력

구조,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권력구조 부분만 손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에서부터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고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고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간판을 바꿔 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김진태 위원**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헌법 개정으로 사회주의 헌법으로 체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이 가능하겠느냐, 이론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은 원래 있던 헌법에 기본적으로 동일성, 연속성이 유지되어야지 체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헌법 개정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겠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전자에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먼저 보기 전에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아직 모르는 것 아니냐’…… 천만에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잘못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우선 질의 순서나 시간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가 간사 간에 협의에 의해서 발언 시간은 5분 플러스 2분 정도로 해 왔습니다. 오늘도 그대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질의 순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미처 배부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김진태 위원님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는 본질의로, 원래 질의 순서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발언할 기회를 더 드릴 수는 있을 텐데 우선은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하시겠어요, 아니면 본질의 순서대로 진행을 할까요?

○**최인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황영철 위원** 먼저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 분한테 그냥 시간을 드리세요.

○**위원장 김재경** 그것은 당별로 정리하시고요.

○**최인호 위원** 우선 저도, 위원장님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사회를 보는 의장님으로서 상당히 격에 안 어울리시는 일방적인 주장, 이것이 헌법특위의 위상이나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상당히 송구스럽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다 이렇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두고 임기만 늘린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이 위원장 취임하시기 전에 작년 헌법개정특위에서부터 정말 이 부분만큼은 수십 차례 이상 논의가 되었고 심지어 국민대토론회 때 세 가지 정부형태를 놓고 이원집정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준비되어 온 그 용어나 개념을 바로잡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려서, 지금 헌법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형태는 방법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삼권분립의 원칙하에서, 특히 국회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권력 분산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다 분권형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위원장님께서 이 모든 대통령중심제가 다 제왕적 대통령이니, 권력 분산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를 다 무시하시고 8년간으로 임기만 늘린다는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1년 몇 개월 동안 헌법특위에서 논의해 온 것을 과연 어떻게 간주하시는지, 이렇게 무시하실 수 있는지 저는 정말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자문위원님들의 의견분포는 말씀하시면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듯이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절대다수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이런 것은 왜 언급을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으로서?

자문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헌법 개정의 마지막 주체이고 결정적인 주체인 국민들의 여론은 왜 언급 안 하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저는 그 편파적인 주장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계속 주장되어 왔습니

다만 이번 헌법 개정을 위해서라도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위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 제약 속에서, 헌법불합치판정 이후에 계속 시간만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국가가 대통령의 발의에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위헌적 상태는 좀 해소하고 난 뒤에 대통령 발의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소한의 국회의 도리도 하지 않으면서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대통령 발의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편협한 주장을 하신 것에 대해서 또한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언제까지 되어야 되며, 언제까지 되어야 개헌이 가능한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헌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또 야당이 소위 개헌저지국민투쟁본부를 꾸려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소위 '사회주의 개헌안이다' 이렇게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것도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개헌 합의를 이루어야 될 국회의 제1 야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 소임과 최소한의 국민투표법 개정도 아니 하고 거리로 나가서 장외투쟁 하겠다는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는지 이에 대해서 제1 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정말 가지셔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편협된 주장을 하신 위원장님께서 이후에 회의 진행하기 전에 헌법개정특위가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논의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과를 좀 하고 난 뒤에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박병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전에, 국민투표법은 저희 특위가 아니고 아시는 바대로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아마 심의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그 경과를 좀 파악을 해서 다음 회의 때는……

○**황영철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황 간사님 말씀을……

아니, 그런데 중간에 막 이렇게 섞어 놓으면 진행이 좀 복잡해지는데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황영철 위원** 예.

○**위원장 김재경**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인영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난 뒤에 제가 입장을 밝힐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첨언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헌법은 제2공화국만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6·13 동시투표를 저지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그 근원에는 개헌 문제가 6·13 선거에 쟁점의 블랙홀이 될 것 같다는 의구심 때문일 것입니다.

여당은 야당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당이 집약된 의견도 없고 그리고 권한 있는 협상에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

특히 이번에 6·13과 동시에 투표를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20대 국회에 개헌이 어려워진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의 쟁점이 팽팽한 이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회를 봐야 될 우리 위원장께서 쟁점 논쟁이 되는 변의 한편에 서서 모두발언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이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를 보게 하는 데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경** 의사진행발언……

○**황영철 위원** 예.

○**위원장 김재경** 황영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황영철 위원** 일단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좀, 다른 얘기는 뒤로 미루고요.

당장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속해 있는 행안위의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입니다. 여기서 그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 통과는 꼭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다 공감을 했어요. 했는데, 이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결국은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 시기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의 통과 여부가 헌법 개정 국민투표의 합의 유무와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여야 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당 위원님들은 빨리 하자는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 야당 측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투표 시기가 결정이 되면 그에 부족함이 없도록 즉시 회의를 열어서 이것은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경 위원장님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김재경 위원장님이 그래도 다른 어떤 위원장님보다도 굉장히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애써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물어 두었다가 오늘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도 위원장님이 이 정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몇 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좀 그만해 주시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김재경 위원장님이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 대변 제대로 못 한다는 불만의 소리도 많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정도 말씀하신 것, 몇 분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좀 같음하시고 다른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개헌안

이 발의되었는데 개헌특위 위원장 입장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는 게 그러면 과연 옳으냐 이런 고민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국회에 와 가지고 십수년간 의원님들한테 받은 비난보다도 오늘 받은 비난이 그 양이 훨씬 많은 느낌인데, 어쨌든 저는 저대로 고민을 했지만 국회의장님의 고민도 저와 궤를 같이하면서 그분의 고민도 상당한 크기일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 입장은 어차피 헌법개정안 발의를 두고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뒤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입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물론 정당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제 생각이 저쪽 당이니까 위원장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진정성은 오늘 이 시점에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보다 좀 더 객관적인 평가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서 어떤 정치적인 공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콤팩트하게 의사진행발언만 하면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께서 얼마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고 공방을 벌이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인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판단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으로서 어떤 발언 하실 수 있고 또 의견 개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진행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그에 걸맞은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이런 것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넘어섰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국회헌정특위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국가의 대사일 수 있는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판단도 안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의사진행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소위원장들이 지켜내지 못할 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논의가 얼마나 살얼음판처럼, 유리벽처럼 약한 부분들을 지나가고 있는지? 그게 무너지면 우리의 논의의 접점을 찾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진지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이든 아니면 저를 비롯해서 소위원장들이든 굉장히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위원장으로서의 말씀은 조금 도가 지나치셨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어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한두 번 정도 우리한테서 재발하면……

사실 저희들 지금 어렵게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렵게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제가 한마디 하면 굉장히 강하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고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적어도 특위 진행과 과정에서는. 그 점을 위원장께서 지켜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어쨌든 이인영 간사님께서 우리 특위 운영에 대해서 생각이 깊으시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신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하여튼 저도 제 나름 고민이 많았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태규 위원님 안 계시고.

박주민 위원님 순서인 것 같아요.

○박주민 위원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님의 개헌안 발의가 있었으니까 관련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사실상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리고 부실하게 거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국무회의 자체의 시간만 놓고 보면 그런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알아 봤더니 국무회의 전에 이미 각

국무위원들에게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계속 밟아 왔다고 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국회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중에서도 보면 어떤 안건들에 있어서 굉장히 짧게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회의가 자동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실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견 조율을 거치고 또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거쳤다면 회의 자체의 길이가 짧다 하더라도 그 회의를 부실하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시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국무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민정수석이 대통령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주도를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안을 발표하는 것을 주도한 것이지요. 발표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법이 그 주체를 정하고 있거나 헌법이 그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이 그 내용을 발표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무회의에 앞서서 국민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린 부분도 사실은 국민분들이 개헌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 전에 마련된 대통령 개헌안을 민정수석이 3일에 걸쳐서 나눠서 발표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겪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폐해를 완화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헌법기관 구성에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현재소장은 호선하도록 그렇게 한다거나 대법원장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예산안에 관련되어서도 예산안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내

용도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현재의 대통령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이다.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토지공개념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 1950년도부터 사실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광범위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2년 유신 개헌 때 산지나 농지를 제외한 기타 국토에 대해서도 국가가 그 소유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이 만약에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한다면 유신 개헌도 사회주의 개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1987년 개헌 때도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을 받아서 1988년에, 노태우 정부 시절이지요.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이 새롭게 나온 개념도 아니고 토지공개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개정안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자유한국당 현재 대표이신 홍준표 대표님의 경우도 2005년도에 1인은 주택을 하나만 가져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하시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보다 훨씬 센 정책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홍준표 대표님의 그 법안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법안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토지공개념 강화라는 내용 자체만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헌안 발의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사실 1년이 넘도록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논

의해 왔지만 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님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가 합의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무회의 시간 자체가 짧았다고 해서 바로 국무회의 심의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나? 그렇지 않다.

또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마련한 안에 대해서 발표했다거나 한 것을 통해서 역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들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할 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실제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을 이유로 사회주의 헌법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토지공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헌법에 도입되어 있었던 내용들이고 야당 의원님들조차도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발의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민봉 위원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께서 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 졸속이지 않다는 논리를 많이 전개해 주셨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모두발언도 한 개인이기보다는 헌정특위 위원장으로서 국회와 행정부,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에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또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떤 지금의 참담한 심정을 그런 표현을 써서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에는 역시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이 졸속이라는 것은 좀 과도할지 모르지만 과속이었다, 비유하면 헌법은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오는 햄버거가 아니고 정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내놓아야 될 완결성을 갖춘 정찬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적·절차적, 민주적 절

차성이 좀 걸려된 것 같다.

국무회의 제대로 하려면 차관회의에서 심의를 먼저 했어야지요. 그래서 국무회의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3월 13일에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민정수석의 발표, 설명이 있었고요.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법제처 심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24일, 25일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23일 금요일 하루, 정말 자구 정도에 집중해서 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우리 행정절차법에 정부가 제출하는 입법안의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22일 오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전문이 올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언제 그 전문을 받아 봤을지, 저는 정말 22일 이전에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그 헌법 전문을 받아 봤으리라고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그 전문을 보고 ‘야, 우리 여당 의견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담겨져 있구나’, 그렇게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국회와 긴밀히 더 협의해서 헌법개정안을 내놓겠다’. 그런데 정말 그동안 국회와 어느 정도 긴밀한 협의가 있었는지, 그런 절차적 숙의성, 숙의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한 달간 활동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국무회의에서 40분 정도라고 이렇게 우리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이 헌법개정안을 가지고 토론해서 40분이 지나기보다는 다른 법안과 함께 제안설명 있고 그냥……

정말 나중에 그 국무회의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어느 국무위원께서 그런 발언을, 의견을 냈는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정말 22일 전문이 공개되기 이전에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그 전문을 보고 의견을 냈고 그것이 반영이 되었고 또 국무회의에서 그런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발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지난

번에도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의 헌법개정안은 그 자체를 국회에서 일반 법안 수정하듯이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한 찬반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 여당 의원들께서 또는 청와대, 정부도 ‘국회에서 여야 간에 헌법개정안을 합의하면 그것을 철회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국회의 논의를 결코 중단시킨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발의한 그 헌법개정안은 그 자체로 준거점이 되는 것이지요.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 또는, 저는 가부장적 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부장적,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여당 의원들께서 대통령 발의 내용의 헌법개정안에 얼마만큼 협상의 폭을 가지고 야당과 합의점을 도출할지 그 폭이 너무나 제한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발의되면.

그 이야기는 여당의 협상 능력, 협상 여력 여지에 족쇄가 채워진다, 그러니까 헌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의 또는 국민적 의견을 담아낼 그런 유연성이 제한된다는 것을 저는 문제로 제기하고 싶고요.

민정수석의 그 발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그래도 간접적으로 국민의 대표성이 전달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이라면 적어도 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를 거쳐지 않습니다—국무총리 이 정도 선에서 발표가 이루어져야지, 비서실은 대통령 임명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부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 헌정특위를 보면 영화 데자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국회가 솔직해야 됩니다. 1년 동안 논의해 왔던 과정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도 못하고 행정부는 불과 한 달여, 물론 국회와 논의했던 과정들을 충분히 보고 들었는데, 자문위원……

이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행정부가 줄속으로

빨리 했다고 질타할 게 아니고 70% 이상 국민이 30년 된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국회가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무능함을 반성해야지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1기 헌정특위 위원은 아니었지만 2기 들어온 지 벌써 오늘이 딱 85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발의안이든 국회 발의안이든 국민의 뜻에 맞는, 시대정신을 담은 그런 헌법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제1 야당조차 자신들이 주장하는 개헌안조차 국민들한테 발표 못 하고 지난 1년 그리고 2기 85일 동안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저것은 돼. 이것은 안 돼’ 마침 오늘 정부안 발표했더니 절차가 어찌고저찌고……

왜 본질적인 것은 스스로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우리가 바라는 정부형태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지 모르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다 또는 내각제다 이렇게 드러내놓고서 논의를 시작하셔야지요.

두 번째,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저는 역대 어느 헌법 개정보다 이렇게 길게 국회에서 논의한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 중에 한 번 빼놓고서 전부 다 대통령, 정부가 발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갈수록 더 많은 정보량과 충분한 논의의 횟수 등등을 갖고 있는 20대 헌정특위에서 시간이 없어서…… 솔직하게는 정치적으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협상을 하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들을 하셔야지요.

오늘 정부가 발의했다고 해서 절차가 문제가 있고, 왜 야당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헌법개정안을 전문부터 마지막 조까지 발표를 못 합니까? 제가 발언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안드렸듯이 이제 정부안도 나왔고 여당안도 나왔고 야당안이 준비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사 플러스 몇 명 해서……

지금 우리 준비된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형태, 전문·총강, 지방분권, 큰 틀에서 이렇게 소위를 나누어서라도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각 당이 요구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에게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4월 23일까지 약 30일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

다.

허송세월로 보내면서 문재인 정부 또는 대통령 개헌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것을 주장할 게 아니고 국회에서 지난 1년 그리고 85일 동안 논의했던 것을 모아 나가는 그런 생산적 논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요. 그것이 국민들한테 일하는, 밥값 하는 국회의원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제1 야당 위원님들께 1야당 안이 어떤 건지, 같이 비공개적으로라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답변하는 길이다……

그리고 합의한 것은 합의한 만큼 또 쟁점 남는 것은 남는 만큼 그것을 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오늘도 이 시간에 지금 원내대표님들이 의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는 특위대로 또 지도부에서는 지도부대로 일이 되도록, 개헌이 되도록 노력하려면 이제 서로 원하는 답안지를 갖고 진지한 토론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경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로 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우려를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국회가 자신의 책무를 해태함으로써 야기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주체 그 누구도 지금 이 시기에 서로를 공격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늘 국회에서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 지독한 국회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 책임인지,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당 한번 인정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참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 점 소회를 말씀드리고, 보도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개헌저지국민투쟁본부 장외투쟁에 나설 것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냥 고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스스로 잘못해 놓고 오히려 남 탓하는 그런 행동까지 국민들이 인내할 사람은 없습니다. 구제불능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대통령 개헌안이 송부됐기 때문에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모두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

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 대통령도 또 그동안 계속 어깃장만 일관해 온 자유한국당도 또 개헌 성사에 무한책임을 다해야 될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개헌이 좌초되는 데 대한 혹독한 역사적 책임이 따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기했던 정치협상 테이블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5당 테이블을 제안했는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4당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국회 운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 통합안을 만들어야 될 상황에서 자꾸만 숫자 규모 가지고 편 가르고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빨리 5당 정치협상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리고, 그리고 저는 핵심 쟁점이 선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이 헌정특위도 내내 지금까지 해 왔던 지루한 대결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5당 정치협상 회의에서 주요 쟁점을 타결하고 헌정특위가 조문별 합의를 이루어내는 투 트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자유한국당은 빨리 개헌 성사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정도만 말씀을 하셨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는 지금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책임총리, 책임장관에 대한 권한 분산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개헌 성사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핵심 쟁점 타결을 전제로 해서 국회 주도 개헌 시간표도 일괄 논의 타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길만이 호랑이를 함께 잡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 저는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국회에다가 개헌안을 보내면 이것은 대통령이 개헌을 하지 않겠다 하는 복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대통령안이 국회로 오면 자구 하나 고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구 하나 고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개헌 논의, 개헌을 해 달라는 70% 국민들의 요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 말하자면 지난번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요구 때문에 출발이 됐는데 그런 내용을 거의 담지 않고 좌파적 개헌 이런 등등 국민들이 제대로 알면 통과되기 어렵고 또 국회 3분의 2를 통과되기는 아주 불가능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제시하면서 정치공세 비슷하게 하는 것은 정말 신성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이 안을 과연 여당에서 얼마나 유연성 있게 대통령안을 야당안과 협상을 하겠느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에 저는 개헌소위에 참여하면서 우리 소위원회들 간에 그런 대로 접점을 찾아가고 또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많이 동감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바깥에 있습니다, 훨씬 더 바깥에. 그래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저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개헌안을 70% 다 찬동한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대통령제를 70%가 지지한다는 것,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문의 요령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제라는 것이 그냥 언어로 익숙해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여론상으로 70% 가까이 대통령이 지지를 받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깐 그게 좋은 건가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옛그제 MB 전전 대통령도 구속이 되고 과거의 모든 대통령이 구속이 되거나 가족들이 다 구속이 되고 시해당하거나 자살하고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후유증이다. 그래도 이것을 해도 좋습니까?'라고 물으면 아마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또 '이 대통령제하에서 여당은 청와대 하수인

으로 거수기 노릇을 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결국은 동물 국회가 되고 또 이것을 막고자, 국민들이 원치 않으니까 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식물 국회를 만들어서 결국은 정국이 국민을 위하기보다도 정파를 위해서 싸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승자독식으로 되어 있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후과 또 그것과 같이 동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래도 대통령제가 좋냐?' 이러면 아마 좀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또 '지금 세계적으로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가진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는 미국뿐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등 이런 후진국이지요. 이런 나라의 대통령제 우리나라에서 꼭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또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국민들한테 해서 오도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안 과정이 졸속적이고 위헌적이다 하는 말씀은 유민봉 위원님이 드려서 제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자치와 분권 조항은 저는 잘못하면 연방제로 갈 수 있는 헌법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개의 주권은 연방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고, 특히 그동안에 남북한 연방제 또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잘못하면 이런 것에 정당성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통일전선전술에 불과하며 미국 또는 독일과 같은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체제가 같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야 하는데 혹시 이런 오해를 국민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 또 김정은이 이것을 착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한다, 저는 우리나라가 3만 불까지 발전해 왔고 국민들이 지금 양극화의 고통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북한의 1000불, 2000불 이런 국민소득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식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제도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치유되고 보정이 되어야 되

는데 이것을 헌법 조항에다 잘못 넣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이 너무 좌파적 인식 때문에 경제발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걱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그런 국민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은 또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삼권 인정, 정치과업 허용의 문제도 과도한 부분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의 봉사자이지 일반 노동자와는 달라 직업공무원의 도입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화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권력의 주체이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에 있어 근로조건 개선을 삭제함으로써 노조가 정치과업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좌파의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자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국민도 많이 있습니다.

헌법은 3분지 2 이상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의. 이것은 바로 법률과는 달리 소수가 걱정을 하더라도, 3분지 1이 걱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제가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국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언급을 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 순간도 국회를 통한 개헌이 제1순위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다한다면 국회의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조속히 끝내 주십시오. 위헌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개헌의 의지가 있느냐는 것을 근본부터 의심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색깔론을 자제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해야 된다는 굳건한 신

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색깔론은 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진정성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약된 의견을 마련해 주십시오.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두 가지 방향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치협상해야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협상해야 됩니다. 이 협상 테이블을 자꾸 미루는 것은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아직 집약된 의견이 없고 정치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면 지도부가 선언해 주십시오. 이 개헌특위에 전권을 위임한다,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하는 선언을 한다면 이 개헌특위가 좀 더 실권을 가지고 책임 있는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1년 5개월의 개헌특위 토론이 결코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아홉 차례의 개헌은 대개 세 달 이내에서 그쳤습니다. 벌써 15개월입니다. 충분한 논의 했습니다. 이제는 토론과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이라는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서로 해소하십시오. 야당에서 여당에게 품고 있는 의구심, 6·13 선거에서 이 개헌 문제를 블랙홀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우리는 털어 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야당은 이번 6·13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물 건너간다는 우리의 주장을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6·13에 개헌이 되지 않으면 다음 개헌의 고리는 21대 국회의원선거인데 지자체 선거에도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21대 국회에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의 책무, 한 달 동안에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권한과 의무를 함께 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개헌특위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국민과 미래만 보고 역사에 책임진다는 자세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개헌안과 우리 당의 개헌안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의 개헌안이 당의 개헌안을 상당수 반영했지만 아직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더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金成泰 위원 먼저 여러 가지 개헌소위와 특위에 1년여 제가 참여해 오면서 여야가 진정성 있게 모든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 기능에 대한 보람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우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미 개헌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강력한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은 저희가 논의해 온 과정을 아시고 계시고 또 쟁점 하나하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의 과실들을, 결실들을 아시고 계시는데 지금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과정의 관제 개헌을 큰 이의 없이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하의 국회의 권한이, 책임이 얼마나 무능하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나하나의 안건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인용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하고 상당히 의견이 같기 때문에. 오늘 일간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헌안이 국민 속이는 정치선언서 같다. 그리고 설령 통과되어도 100% 위헌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냈던 전문가가 의견을 낸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개헌안은 마치 정치선언서 같습니다. 요소마다 대통령선거 공약, 현 정부의 기초, 좌파 정치이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국회는 기존에 논의한 것은 하나도 살릴 수가 없이 바로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여당 위원님들께서 전부 우리가 노력해 온 것을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

과정 그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거쳤다고 하지만 이것도 청와대 비서실이 아닌 국무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다라는 비판이 있자 졸속으로 대통령이 부재한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도 차관회의나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국회 전반의 체제를 바꾸는 이러한 헌법에 관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는 과정의 개헌 과정인지, 이 자체가 벌써 청와대의 비서실을 통해서 조국 민정비서관이 나와서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듯한 설명을 하면서 그것도 쪼개기로 세 번이나 쪼개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개헌을 설명하는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의 개헌 과정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색깔론을 가지고 하지 말자 하는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구성 자체가 이미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이 정부 제출 개헌안 작성의 책임을 맡긴 정해구 위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의 이념적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 위원들도 매우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대를 거쳐서 우리 국회에서 헌법을 논의하고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그런 내용은 깡그리 무시된 채 한 달 내 이런 치우친 인사로서 구성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가, 또 국회가 여기에 대한 자구수정도 못 하는 이런 결과를 나올 텐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들 면면을 봅시다.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의 통진당 측 참고인, 이적당

체 한총련 의장 출신, 노무현 정부 인사, 문 정부 캠프 인사, 민변·참여연대 출신 코드 인사, 좌편향 인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문위원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구심을 가지지 않게 해야 그런 색깔론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 끝났습니까?

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 개헌특위나 소위에서 논의한 토지공개념이나 이런 문제도, 물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헌법에 집어넣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주의 헌법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문위원 구성원과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이런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국회 여야 간에 충분히 토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유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개헌 과정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경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권자들 간의 합의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데요. 지금 이 개헌 문제, 개헌 발의와 관련된 쟁점에서 대통령과 국회 또 대통령과 각 정당 간에 원만한 대화와 합의에 의해서 방법이 하나로 통일됐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합의가 안 됐다고 끝까지 우리가 막 정글처럼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합의가 안 되면 법이 있어요, 법. 법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법 이전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자는 거지, 합의가 되면 제일 좋은 거고 합의가 안 된다면 그냥 법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발의를 가지고 우리 국회가 언제까지 이 논쟁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혜로운 숙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대통령 발의가 우리 국회의 권한 내지는 국회의 과정을, 절차를 다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영향을 미치면 이 논쟁을 좀 오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발의와 국회 발의가 우리 헌법에 별도로 보장되어 있으니 제가 보기에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빨리 현명하게 찾아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 발의안 내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그냥 법대로 나중에 표결할 때 반대 의견을 표로 표현하시면 돼요. 우리 국회 헌정특위가 해야 될 일은 대통령 발의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표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불만 많으시면 표결할 때 반대 찍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국회 발의안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왜 1시간 동안 대통령 발의안 가지고 논쟁을 합니까?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대통령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설득은 포기하시고, 왜? 그것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합의가 안 됐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안보다 더 좋은 국회안을 만들라고요, 지금 빨리 토론을 해서. 그것을 왜 자꾸 비판하세요?

지금 우리가 헌정특위에서 여러 번 논쟁했잖아요? 그 논쟁을 좀 더 한 단계 성숙시켜서 대통령 발의안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 혹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점들을 국회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대의 아십니까? 우리가 국민 대신 의논하는 기관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훌륭한 점이 그것입니다. 똑같은 헌법기관으로서 대의적 정통성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은 대신 집행하는 기관이고

국회는 대신 의논하는 기관으로서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안에서 미처 실현되지 못했거나 살피지 못했던 안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지 말고 지금 빨리 국회 발의안을 준비하는 쪽으로 우리 헌정특위의 에너지를 좀 집약시키자 이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이 논쟁을 통해서 대통령 발의 문제를 바꿀 수 있으면 논쟁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께 여러 번 이게 전달됐고 대통령이 다른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헌법기관으로서 다른 판단이 있는 것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는 국회 발의안을 빨리 논의하는 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정말로 당대표들 간에 책임 있는 정치협상이 필요한 때가 됐고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 헌정특위에다 그 권한을 주시라고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시면 우리 헌정특위에서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실질적인 조항에 대한 기초 논의를 기초 소위를 만들든지, 왜냐하면 헌법소위도 있고 정치개혁소위도 있으니 각각 소위별로 기초안을 만드는 소위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국회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할 일을 해야 국민들이 ‘아, 국회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국회의 손을 들어 줄 것 아닙니까? 국회가 대통령안 갖고 싸움만 하면요 국민들 마음은 더 떠나갑니다, 대통령안이 좋은가 보다 하고, 대통령이 잘하나 보다 하고 대통령 말만 듣고 국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다 반대할 거예요, 아마.

싸우지 말고 일하자고요. 우리가 일해서 만들면 국민들도 국회안이 더 낫다고 국회안대로 하라고 국민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헌정특위가 해야 될 일을 하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섭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鄭宗燮 위원 제 말씀 중에 혹시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된 성격이 있는 그런 내용은 시간을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미 대통령이 헌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국회에 헌법안이 들어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우리 개헌특위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었다면 그다음부터는 법에 따라서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우리 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특위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우리 특위의 관할 사항이 아니다. 그것을 논의하는 절차는 다른 구조로 국회에서 달리 만들어서 이게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논의를 하든 검토를 하든 하여튼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안의 내용을 두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도 않을뿐더러 그것 해봐도 지금같이 이렇게, 여당 위원님들이 그것 비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옹호하는 쪽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야당은 비판하고, 이것은 백번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을 먼저 다 판단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까지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해 온 이것이 대통령의 발의로서 스톱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다. 대통령 발의는 발의대로 그쪽은 끝났고 지금 우리로서는 기존에 논의해 오던 이것을 지속적으로 살려서 논의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음 개헌특위 회의에 모였을 때 또 오늘같이 이런 얘기만 계속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발전시켜 보려고 하면 한 방법이, 어떤 정치협상 틀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원래 우리가 다루던 그 문제로 돌아가자라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1년 동안 뭐 했느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헌법 개정에서 두 가지 틀이 필요합니다. 뭔가 하면 하나는 합법성을 확보하는 거고, 하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왜냐하면 국민의 의사로서 이게 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개헌특위에서 논의한 것은 가능한 한 1년의 시간을 가지면서 국민들에게 과연 헌법 개정이 필요한 건지 안한 건지, 만약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또 지금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을 극복하려면 어떤 어떤 어떤 부분을 손을 대야만 이게 정말로 필요한지 그 논의를 하자고 제가 그만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그 문제는 전부 뒤로 빼놓고 늘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만 반복하다가 1년 세월 다 허송세월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의원들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합법성만 자꾸 쫓아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당성,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런데 지금 핵심적으로 남아 있는 쟁점이 권력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권력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국민들 상대로 논의도 하고 오픈토론회도 하고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 간에 그 논의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 보고 정말 도저히 안 된다 하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 가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헌법안 발의를 안하시는 것이 옳았지 않나, 사실은 너무 성급하게 해서 가지고 저희들 논의가 참 어려운 구조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도 원래 우리의 페이스를 찾아내면서 가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마는 이제 위원들 상호 간에도 너무 예민해지면 할 필요도 없는 말들을 자꾸 하고 거기서 서로 간에 신뢰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손상이 가다 보면 일들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다루는 어떤 안건이 있다면 위원들 간에는 정말 어떤 어떤 것은 조심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결론에 도달되도록 하자 그렇게 이것을 만들어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 윤관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우리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헌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달을 가리킨 것을 달을 안 보고 손가락 보고 손톱 보고 누구 손이나 따지고 왜 이 손가락 올렸느냐 저 손가락 올렸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헌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 국민의 요구, 여론상으로도 확인되어 있습니다만 30년 체제의 개헌들을 새롭게 미래 설계해서 바꾸자고 한다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논의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 헌정특위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개헌 얘기 나오기만 하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니까? 이번에도 정부 발의라고 해서 관제 개헌이다, 사회주의 헌법이다, 색깔론, 이 세 가지 정도 외에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지적이고 거짓 선동이고 무책임한 정치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계신 헌정특위 위원께서 그렇게 발언하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발의한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몇 가지로 규정해서 과연 이것이 휴지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헌법학자들 또 작년에 우리 헌정특위에서 1년간, 15개월간 논의한 것과 실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상당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싱크로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군데의 쟁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발의 주체가 정부라고 해서 관제 개헌, 내용의 한두 가지를 따서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고 무책임한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색깔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박정희 정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노태우 정권에서 처음 도입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혼란을 막고자 이번 개헌안에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 그 실질적인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주의 개헌이다 이렇게 몰아

서 매도하는 것이 묻지마 색깔론, 정치적 폐해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 외에 과연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을 128조 2항에 내용을 넣었다고 해서 사회주의 헌법의 묻지마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들이 안다면 참으로 어이없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몇 가지 꼬리표만 갖고 개헌안을,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갖다가 평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을 이제부터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이제는 정부의 개헌안을 받아서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을 만들 골든타임이 온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또 해내는 게 국회의 그동안 축적된 역량이고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유당의 개헌안이 무엇인지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계속 밝히겠다 여러 차례 얘기해 왔지만 밝히지 않고 아까 말한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그것도 거짓을 잘못 혼동해서 색깔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들의 개헌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야지만 개헌안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생산적인 헌법 개정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헌정특위가 전체회의도 중요하지만 헌정소위가 또 매주 월요일 날 열리고 있는데 이제는 헌정소위에서 그동안 축적됐던 내용들 가지고 또 이번에 정부 발의한 내용 가지고 해서 발의안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회에서 안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안이 있고 야당안이 있고 정부 발의안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집중적인 논의를 이제라도 헌정소위가 시작을 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합의 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몇 개의 쟁점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국회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앞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발의 주체, 그다음에 헌법개정안의 처리 시기, 여러 가지를 놓고는 헌정특위에서 내용을 논의하는 것과 아울러서 협상의 또 정치적인 논의의 테이블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저희 당

의 원내대표께서 야당에게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정특위 내에서, 오히려 헌정특위가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 갖고 여당 간사, 야당 간사 또 위원장 이런 분들이 우리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안을 만들겠다, 그러나 거기서 쟁점 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시기 문제,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이 같이 참여하는 논의의 테이블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개헌안의 조문을 다 봐야겠습니까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헌의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헌정특위가 작년 부터 해서 15개월 해 왔던 것의 최종적인 레이스가 남아 있습니다.

6월 지방자치의 동시투표는 모든 당의 공약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헌정특위가 주도적으로 할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 방금 전에 속보 뜬 것을 보면 ‘여야 3당 교섭단체 개헌 협상 돌입키로’라고 속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만들 상처 주시고 대화를 하면서 솔직하게 논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합의를 못 이룬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바른미래당은 얼마 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서 바른미래당만의 개헌안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 생각이 다른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당만 있는 게 아니고 소수당도 있는 것을 민주주의의 정신에 맞춰서 기다려 주신다면 훨씬 좋을 텐데 ‘너희 사정은 너희가 알아서 하고 여기에 맞춰라’라는 식으로 몰아붙여 가는 것은 조금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 26일 발의할 것을 요청해서 21일 할 것을 26일 날, 오늘 발의가 됐는데요. 사실 이

개헌안은 1987년 이후에 31년간 기다려 온 국민의 여망입니다. 5일 늦춰 준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자화자찬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개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내용이더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박완주 위원님도 그랬고 또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공청회도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런 게 아쉽고요.

87년 10월에 개헌안이 마련됐을 때, 그때 5공화국 시대입니다. 그 당시 많은 분들이 군부세력과 투쟁을 했다고 평가하는 시대인데도 그때는 국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좀 더 깊은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말해 온 것들에 대해서 뒤돌아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작금의 눈앞에 있는 유리한 정치 지형만 고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국민한테 결코 옳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2003년 12월 17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005년 4월 6일 문희상 의원께서는 ‘중·대선거구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2007년 1월 31일 민병두 의원께서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제 등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 선거법 개정을 동시에 하면 진보정당과 소수당의 설 땅이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2009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셨던 이상호 의원은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싹쓸이 하는 소선거구제로는 지역주의 극복이 안 된다. 중·대선거구제, 민주당도 검토하고 있다’, 2013년 6월 4일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전 의원께서 ‘민주당의 당론은 중선거구제도다’, 2014년 10월 3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엇보다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바꾸기 위해 중선거구제 전환 개헌 과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5년 1월 16일 원혜영 의원께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그리고 석패율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의 전 원내대표이셨던 정우택 의원께서 ‘이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와 비례대표 정수 문제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원내대표이신 김성태 의원께서 2015년 4월 13일 ‘중·대선거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대체 왜 지금 와 가지고는 중·대선거구로 선거법에서 다 해 놓은 지방선거 때 선거구제를 싸그리 무시하면서 그렇게 광역의회에서 폭거를 자행하셨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셔야 됩니다. 낫을 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당의 폭거입니다. 사과하시고요.

이런 개헌이 되어야 진정성 있다라는 것 국민한테 보여 주시기 위해서도 양당에서 말씀하신 것, 정말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는 말이 귀에 들려 올 수 있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욱 위원 지금 개헌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근대사의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나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사에 영향을 참 많이 준 두 가지 사건을 헌법 전문에 넣었으면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첫 번째 건은 우리가 6·25라는 국난을 극복했던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6·25가 사실은 공산 세력들이 남한을 침공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전 국토의 한 70%가 인민군에게 점령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를 성공적으로 지켜 낸,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통일에 이르지 못했지만 현재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켜 내는 데 중요한 사건이었고 거기에 우리 한국민들이 나름대로 뚫쳐 가지고 국난을 극복했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 사건을 의미 있게 다뤄 가지고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이룩한 것을 헌

법 전문에 그 의미를 넣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해방 직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고, 그 경제적인 성장은 단순히 한 정부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한 개인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부와 국민과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힘을 합쳐 가지고 산업화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 사건을 같이 넣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헌법 전문에 여러 가지 민주화를 위한 많은 지난한 역사를 우리가,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여러 지난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6·25를 통해 가지고 공산 세력들을 극복했던 내용과 그리고 또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현재 오천년간의 가난을 물리치고 지금 어느 정도 먹고살게 된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도 헌법 전문에 같이 넣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정춘숙입니다.

먼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셨지만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회 헌정특위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이런 상태에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국회에 책임이 있고 또 헌정특위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작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시작이 될 때 모든 참여하신 분들은 자문위원을 포함해서 30년 만의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너무나 감격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 아직 시간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이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훨씬 속도 있는 의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조문소위를 만들든 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조문화 작업에서 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안들의 마련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 당의 원내대표들 또 당대표들, 헌정특위 간사 포함한 정치 협상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 국회의 좀 더 신속하고 또 적극적인 노력이 결국은 30년 만의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출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비판이 누구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신 이 법안에는 이미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얘기되었던 예를 들면 지방분권의 문제라든지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에 감사원과 인사권의 독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경우는 다른 의원님에 의해서 이미 법률안으로 제출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본질을 훼손하는 이런 부분은 누구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안 되고요. 헌법개정안은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시대정신, 즉 평등·인권·자유 확대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는 것으로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질을 훼손하는 비판은 좀 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에서 아직 시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논의를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여당 의원들이 과연 대통령안을 어길 수 있겠냐?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다 예단입니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가 논의해 봐야 아는 부분이고요. 이미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합의한 안들을 존중하겠다’ 이런 천명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신속하게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다음에 이태규 위원님이나 김상희 위원님 두 분 중에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이태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태규 위원** 대통령께서 발의하시겠다고 하는 헌법개정안은 이번 헌법 개정의 논의 배경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시작됐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헌법 개정의 기본정신은 분권입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든지 아니면 국회나 제3의 공간으로 이동시키든지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축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개정안은 분권 의지는 형식에 그치고 대통령의 임기만 늘리고 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도 그대로이고 예산편성권이나 법률안제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독점 차원에서 본다면 현행 헌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대법관추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법부 독립을 가로막는 개악적인 내용도 보입니다.

그동안 여당 위원들께서 국회헌법개정소위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비해서 대통령의 개정안은 분권의 의지와 진정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개헌안에 정말로 권력의 분권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대통령 개정안 발의는 정치적으로 불필요하고 자제해 줄 것을 야당들은 거듭 요청했고 국회 논의나 통과가 불가능함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을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시면 이 부분이 야당 심사를 굽자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선거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대통령의 개정안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개정안을 놓고 논쟁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청와대가 의도하는 대로 국회가 끌려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발의에 명분을 주고 일하는 청와대와 소모적 논쟁을 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대입되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는 대통령 개정안 공고일 20일 동안에 정부형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혁이라는 개헌의 큰 기조와 개헌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해 내고 대통령의 개정안은 공고 기일 20일이 끝나는 대로 즉시 상정해서 조기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통령 개정안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 국회가 국민에게 개헌을 확실하게 해내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은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하고는 데 있어서는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국회에 접수가 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적절치 않다 내지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판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대통령께서 정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의 적정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책무인 개헌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협상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뉴스 속보 뜬 것을 보니까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협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이 협상에 임하는 여야의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이는 첫 번째가 저는 국민투표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국민투표법은 아시다시피 현재가 적어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할 것을 권고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여야 통틀어서 5건이나 발의되었고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의원 발의안에는 김성태 원내대표도 공동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개헌하고 무관

하게 이미 현재의 판결에 의해서 2015년까지 개선 입법할 것을 권고를 받고 정치권이 했어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국민투표법이 인질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황영철 간사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헌법 개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제대로 마무리가 될 때 함께 이것도 개정을 해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엄연히 이것은 별도의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정말 국회가 마땅히 해야 될 책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투표법을 지금 헌법 개정 논의의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시기의 문제나 내용의 문제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정성 있게 협상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국민투표법은 이번 3월 국회, 4월 국회에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먼저 행안위를 열어서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4월 20일까지는 이게 되어야 됩니다. 4월 20일에 이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명부 작성에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하고 또 달리 이 부분은 법이 개정이 되고 명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20일까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법을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야 협상이 타결이 될 때까지 붙들어 놓겠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헌법 개정 협의와 별개로 국민투표법을 인질 삼아서 헌법 개정을 지금 여당이 주장하듯이 지방선거 때는 도저히 할 수 없게 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의 문제라든가 권력구조의 문제라든가 권력기관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부분, 선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요한 부분으로 협상에 들어가는데 이 협상과 관련해서 제대로 진정성 있게 협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가 지금 이 개정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인질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국민투표법은 개헌과 무관하게 이미 2015년까지 개선 입법할 것을 권고 받은

것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다가 이참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투표법 개정을 4월 20일까지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너무 왜곡되고 정말 너무 막가는 평가들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주의 개헌이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낸 개헌안은 사실은 민주당의 당론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유사합니다. 몇 부분을 빼 놓고는 거의 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갖고 있는 우리 개헌안과 같은데 이 부분을 세세하게 보지 않고 그저 거기에 딱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것을 매도하고 색깔론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색깔론에 속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이제는,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매도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우리의 개헌 논의가 생산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국회의 거둬진 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제인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발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저희 국회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도록 어떤든지 간에 구실을 만든 점이 있습니다. 국회가 과연 1년 6개월 동안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10월 이후로 개헌안 논의에 실질적으로 협상과 초안 작업을 미루어온 자유한국당, 또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춘 일방적인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저

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어떻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자제되었어야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거대 제1 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결될 것이 상당히, 거의 뻔한 이런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헌안은 모든 국회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대의기관들이 모여서 타협을 통해서 국민적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안 발의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실제로 대통령과 청와대, 특히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한 것 이런 것들도 무려 위헌의 소지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차상으로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개헌안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위원으로서 사실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2주 이내로 조문 작업을 충분히 다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늘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앞으로 개헌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조금 전 합의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합의대로 하루속히 협상팀을 꾸려서 국회 나름대로의 협상안을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게는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서 구속되지 말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야당은 30년 된 헌법을 제대로 개헌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이번 개헌안에 반드시 담고 또 시기적으로도 가능한 한 6월 13일 지방선거에, 작년 대선 때 약속한 것처럼 제대로 지켜 달라고 하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받는 그런 논의의 협상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개헌안이 이미 발의가 된 마당에 이제는 저희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의 일부 문제점이 뭐다 아니면 그것의 당부에 대해서 의논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개헌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해서 속히 합의를 하고 지방선거에서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약 그러한 점이 여러 가지

상황상 불가피하다고 할 경우에는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개헌의 구체적인 시기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헌법 개정에 관한 시간을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별도의 헌법 개정 절차법을 제정해서라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완결 지을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여야 간 정치 합의라는 것이 때때로는 정치 현실에 밀려서 사문화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헌법 개정 일정을 담은 헌법 개정 절차법을 만들어서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헌법 개정 절차법이 앞으로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개헌특위 이외에 올해부터는 별도의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만든 취지는 바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개헌과 같이 일괄 타결하기로 여야 간 합의를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제도, 특히 정당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의 많은 논의를 신속하게 거쳐서 개헌 문제와 함께 아울러서 일괄 타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등을 열린 마음으로 협상해서 이번 기회에 완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차원에서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서 논의되기 전에 여당 위원님으로부터 충분히 사전에 자료가 전달되어 왔고 의견 조율을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제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언제 사전에 자료를 줬고 이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수정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속히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5시에 헌법개정안이 국

무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 제기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을 헌법 개정엔 핫바지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차원에서 자료 요구하시고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어쨌든 저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대단히 나쁜 헌법이다, 이와 반대로 국회에서는 좋은 헌법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사실은 여야 내에서도 복잡한 속사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좋은 헌법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이 작업을 성공시켜 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위원장님과 함께 또 존경하는 이인영 간사님과 또 김관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 위원님들의 충정도 바라고 싶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왜 야당이 안을 안 내놓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여당도 안은 안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은 적절한 시점에 협상의 테이블에 올릴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드립니다.

국민투표법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필요하다면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민투표법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에서 여야가 나름대로 인정해서 계류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마치 자유한국당이 이런 것을 ‘인질 삼아서’ ‘볼모 삼아서’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은 오히려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뿐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상희 위원** 특위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황영철 위원** 어쨌든 실효적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2015년부터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치 지금 당장 우리가 무슨 발목 잡기 위해서 이것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들에게 왜 이것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하고 또 그것을 전파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들 원내에서는 진지하게 이 헌법개정안을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견은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번 헌법개정안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권력구조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히 많은 논의를 해야 되고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협의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는 데 저는 상당히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구조에 따라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디자인들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공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제 정파의 뜻을 다 담아내거나 아니면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결코 짧은 시간으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논의들이 마치 6·13 선거에 맞춰서 우리 국회 안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대단히 부족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교하지 못한 영성한 헌법개정안이 마련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난 기간 동안 우리 국회가 제대로 논의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난 과정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위에서는 어쨌든 우리 진지하게 논의를 했고 그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협상의 과정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협상의 과정에 있기까지 지난 시간들의 노력이 저는 결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준비된 안으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요. 그것을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헌법개정안, 국무위원들한테 제공된 시기, 방법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것 어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황영철 위원** 총리한테 내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재경** 총리실예?

○**황영철 위원** 아니면 각 국무위원들한테 다 보내셔도 되고요.

○**위원장 김재경**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석전문위원께서 그 취지를 잘 파악해서 가지고 알아보세요.

일단 이인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인영 위원** 황영철 위원님께서 몇 가지 굉장히 건설적인 제안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이 나쁜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이미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의 주요 골자들에 대해서 좋다, 참 좋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더 노력해서 좋은 헌법을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은 매우 건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하겠다, 이 약속도 지키는 방향에서 그런 건설적인 제안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입니다.

국민투표법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인질이다’ ‘볼모다’ ‘발목잡기다’ 어떻게 표현하건 간에 정치적인, 정략적인 고려 없이 필요하다면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저는 매우 건설적인 말씀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다만 시한을 그렇게 많이 뒤로 두는 것은 또다시 정략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한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는데 몇 가지 아닌 건 아닌 문제들이니까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회주의 개헌이다 이런 지적 있으신데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지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유재산을 불허하고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고 일당 독재를 관철하고 이런 것이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일 텐데 우리 헌법 어디에도 이런 요소는 찾아볼 수 없고 우리 당과 대통령의 개헌안에 이런 부분은 없다, 이것을 너무 악의적으로 자꾸 동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

씀드립니다.

우리 헌법 23조는 개인의 재산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다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필요에 의해 가지고 어떤 제한과 부과가 있다 하더라도 보상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정당 설립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복수정당제가 허용됐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비례성의 원칙을 선거제도에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다당제 설립 요건까지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요소를 검토하지도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회주의 개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나쁜 매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방제, 고려연방제 주장과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이미지 연상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아신다면 고려연방제는 1국가 2체제를 지향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을 강화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1국가 1체제 내에서 다양한 발전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연방제가 다 고려연방제와 연결된다면 지금 미국의 연방제는 고려연방제하고 똑같은 겁니까? 말이 아닌 것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 집권 음모다, 4년 중임 혹은 4년 연임제가 1987년에 도입됐다면 반드시 대통령 1인의 과도한 권력집중 이것 완화하고 해소하면서 진행됐을 것입니다. 임기 연임·중임 조항은 반드시 대통령의 권력 분산하고 연결되어서 이른바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과 한 패키지로 있고 지난해 개헌특위 논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확인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장기 집권이라고 하면 특정 집단의 아버지 박정희, 특정 집단의 큰형 전두환, 이런 군사독재들이나 하던 장기 집권의 음모, 그들의 후예, 이렇게 낙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무슨 정략이 있겠습니까,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들한테 정략이 있는 것이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약속을 파기한 사람에게 명백한 정략이 있었던 것이지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면 뒤늦게 따져 보니까 ‘투표를 올라가면 선거에 불리하고 그러니까 연기하자’ 그게 정략이지 어떻게 약속을 지키려

고 하는 사람이 정략입니까? 앞뒤 안 맞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 개헌, 이미 지난 회의 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때 필요하다면 자신도 정부 개헌안을 발의해 가지고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2016년 9월 대정부질 의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헌 발의권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도 개헌에 주도적으로 나서라’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난해는 정권 바뀐 이후에도 9월에 이낙연 국무총리한테 ‘6월 동시 개헌 약속 지킬 거지요?’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래 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관계 개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개헌판 내로남불’ 아닙니까?

지난해 개헌특위에서 왜 대통령후보들 와 가지고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겠다는 약속 받으려고 했습니까, 도대체? 국회에서 지지부진하더라도 대통령이 가진 개헌 발의권을 가지고 6월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하자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 그것 건 것 아닙니까? 맥락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저는 황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 심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맥락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과도한 낙인을 통해서 악의적인 정략들이 개입되지는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께서도 우리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주질의는 다 끝난 셈인데요.

안상수 위원님.

○안상수 위원 자구 해석을 그렇게 해 주시고, 이인영 위원장이야말로 민주당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리더이시고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그(ideologues)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주의 문제나 장기 집권 문제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개헌이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훌륭한 헌법을 그야말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민들한테 호도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권력 분산을 여하히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것을 골간으로 해서 헌법 초안을 만들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6월 13일이면 어쨌고 7월 17일이면 어쨌고 8월 15일이면 어쨌고 10월 5일이면 어쨌습니까? 아까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날짜를 그야말로 여야 간에 정해서 국민들한테 합의된 날짜를 해서 그때 시행하면 된다.

아까 신문에 보니까 용지가 7개입니다, 7개인 데 여기다가 8개까지 하고, 그다음에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5월 말 북미 정상회담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70년 만의 위기라고도 하고 70년 만의 기회라고도 하고, 그러면 그런 데 집중하시고 국민들도 거기 어떻게 잘 하는지 눈을 부릅뜨게 보고 그러고 나서 선거 잘 끝나고 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이인영 위원 제가 백보 양보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해 9월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는 게 여러 가지 무리가 있으니까 개헌 연기합시다’ 이랬으면 야당들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헌의 시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을 벌이기 이전에 확고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헌과 관련해서 가장 공고하게 가졌던 합의입니다. ‘그게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헌안의 방향, 내용,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 문제만 이야기하지 않고 개헌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고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는 시기에만 집착하는 문제로는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추수할 때 추수해야지 눈 올 때 추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상수 위원 제가 진짜로 1분만……

원래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장님하고 제가 매일 회의를 하고 저도 개근하는 위원인데, 애초에는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탄핵 정국에서 ‘이제 개헌

하고, 개헌한 새로운 헌법으로 다음 정부를 구성합시다. 개헌을 하나의 새로운 미래로 승화시킵시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리하시니까 '그것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래 가지고 '그러면 내년 지자체 때 하자'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신 거고, 거기에 쫓아서 '그러면 그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너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저도 한 말씀 다시……

사실이 아닌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안상수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인영 위원 명백합니다. 그것은 안철수 대표가 먼저 제안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확고히 공약해라. 그것을 개헌특위에 와서 약속해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당시에 여당을 비롯한 다른 분들의 더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요. 그것은 제가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안상수 위원 아무튼 원래는……

○이인영 위원 원래가 그렇습니다.

○안상수 위원 원래는 개헌하고 나서 그 개헌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산이 되면서……

○이인영 위원 그런 적이…… 안 위원님 충분히 존경하니까 더 이상 사실로 제가 공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기억이 아마 더 정확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글썄, 두 분 간의 이견은 뭐이 정도 하셔도, 나중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별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자제해 주시고.

김상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상희 위원 지금 두 분 말씀 들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특위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개헌 논의한 지가 1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선 국면에서 모두 다 약속을 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6월에 국민투표 하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분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권이 그렇게 무능하고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6월에 국민투표를 동시 투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을 납득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개정안을 발의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15개월 동안이나 논의를 했는데 저는 합의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결단하고 합의해서 6월에 동시 투표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20대 국회가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 어쨌든 여야가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약속 지키고 그리고 20대 국회의 책무인 헌법 개정을 이번 6월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황영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황영철 위원 어쨌든 이번 헌법개정안은 다른 법률안과는 다르게 제 정파의 생각을 고르게 담아야 하는 보편타당성·항구성 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정치 지형 때문에 또 이것이 너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헌법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합의의 과정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좁히기 가면서 결국은 노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될 헌법은 정말 아주 혁명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많은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지난 15개월, 15개월' 말씀하시는데요, 지난 15개월 전이 언제였었습니까? 그 당시의 논의가 이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숙의되고 합의 과정이 시작됐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합의를 하자고, 협의를 하자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15개월이 지났으면 저는 그런 비난 들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 그 기간들의 충분한 논의의 결과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다가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결국은 누워서 침 뱉기 아니에요? 야당을 향해서 지난 1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고, 국회라고 뭐……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면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합의의 과정이 저는 국민들에게 국회를 새롭게 보여 주는 과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회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 합의안을 도출해 가는 중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회의 모습도 함께 보여 주자,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상희 위원** 어쨌든 우리에게 한 달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 달의 기회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김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경** 김관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여야 위원님들 간에 공방이 좀 있으신데요.

황영철 위원님의 말씀 중에 ‘국회가 협상과 타협 또 숙의 과정을 거쳐서 보편타당한 또 지속 가능한 헌법개정안을 만들어야 된다’ 또 ‘정치 지형 때문에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대 국회가 불과 2년 전에 구성이 됐습니다. 다만 구성된 지 불과 5개월, 6개월, 7개월 지난 다음에 촛불 민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민심을 많이 변화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된 민심도 수용해야 되고 또 20대, 불과 2년 전에 구성된 국회에서의 원 구성 현황 또 국민께서 만들어 주신 정치 지형 이것도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있고 또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오늘 여야 대표들이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를 한 만큼 이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15개월 동안 논의되어 왔던 많은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단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기에 관해서도 서로 과거의 잘잘못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로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들 참 좋으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발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황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문제하고, 그다음 지난번에 우리 전체회의 일정에 대해서 그때 매듭을 못 지었는데 정회하고 하느니 그냥 간사님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가지고 세 분이서 잠깐 좀 이야기합니다.

○**이인영 위원** 끝나고 하세요.

○**위원장 김재경** 끝나고?

아니, 그런데 그 자료제출 요구 문제는 해결을 하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황영철 위원** 자료제출을 여야 간사 합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제가 요구한 거예요.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자료제출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자료제출을 여야 간사 합의로 합니까?

○**이인영 위원** 그런 게 없어서 그랬어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식의 자료제출은 좀……

○**김관영 위원** 황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경** 관례대로 그러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우리 위원회가 아니면 그 자료를 요구할 만한 데도 없긴 없을 것 같고 하니까 관례에 따라서 그러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의 우리 회의 일정은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별도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김관영	김상희	金成泰	김재경
김종민	김진태	박병석	박완주
박주민	심상정	안상수	유민봉
윤관석	이인영	이태규	정종섭
정춘숙	정태욱	지상욱	최인호
황영철			

○청가 위원(2인)

나 경 원 이 중 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회관

수 석 전 문 위 원	한 공 식
전 문 위 원	정 연 호
전 문 위 원	정 성 희
입 법 심 의 관	장 지 원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경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2018. 3. 26.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2018. 3. 21. 김성원·이양수·민경욱·이명수·정우택·유기준·김재원·홍문종·김태흠·엄용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8. 3. 21. 신보라·윤종필·홍문표·함진규·문진국·박명재·김선동·이종명·최교일·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2일 회부됨